

한국 정치계의 젠더 불평등 문제와 방향 - 여성과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17학번 박성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은 묵살되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은 원색적인 비난이나 편견 속에서 고통받기도 한다. 일상 생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수자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소수자 혐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젠더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집단이 경험하는 소외와 차별이 논란되고 있다.

소수자 또는 소수집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수적인 인원이 적은 집단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주류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다. 따라서 여성은 수적으로 보면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이 정치와 경제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며, 실제로 5년째 OECD 성 평등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은 17%정도에 그치며, 여성 공천 할당제가 없었다면 그 비율은 더욱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500대 기업 중 삼성전자는 1188명의 임원 중 48명만이 여성으로, 겨우 4%수준이고,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15년에야 첫 여성 임원이 나왔다. 심지어 336개 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급여와 승진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기준, 남성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8066만원으로 여성보다 약 3000만원 정도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여기는 성차별적 관습과 여성에게 단순 업무만 맡겨 애초에 고위직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가부장적 기업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 여성 혐오는 제도적 차별이나 비하만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존재나 고결한 존재로 타자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여성 혐오라는 단어는 영어 misogyny로부터 온 말로, “여자는 운전을 못한다”, “여자는 사치스럽다”, “여자는 이공학적 이해도가 떨어진다”, “여자는 악하고 가녀린 존재다”, “여자는 꽃이다” 모두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여성 혐오 발언으로, 각종 미디어에서도 여과없이 유통된다. 이러한 성차별적 관념과 남성 중심적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2015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에 동참한 여성 및 남성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을 젠더 기득권자로 상정하고, 남성 중심적인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은 과거와 양상이 조금 다르다. 한국 페미니즘의 경우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과 전쟁을 거치며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국가 주도 경제개발 시기였던 70년대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감당해야 했다. 이때 최초의 여성노동조합인 청계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동일방직 사건 등을 거치며 생리휴가와 남녀 임금차별 폐지 등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냈다. 당시 여성운동은 노동인권의 의미가 컸으며,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에도 이어진다. 다만 80년대에는 신군부의 강력한 노조 탄압이 이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노동운동의 활동과 조직의 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 대신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운동권과 진보지식인 사이에서 계급갈등을 여성 억압의 근원으로 해석하는 마르크스 페미니즘이 주를 이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페미니즘 운

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 운동은 더욱 넓은 스펙트럼의 여성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그동안 금기로 여겨진 여성의 몸을 다루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여성운동이 보다 대중화되어 전통적 가족제도와 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 활발했다. 또한 2001년에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되어 제도적, 정책적 개혁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여성운동은 젠더 권력과 위계를 겨냥한 투쟁적 의미가 희석되어 매우 온건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여성 운동의 발전이 무색하게 이후 여성 혐오는 오히려 심해지고 말았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며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여성이 시장에 진출하며 비난의 화살은 여성을 향했다. 2015년 등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는 이러한 흐름의 반작용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다시 공론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메갈리아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정치적 차별과 일상에서의 여성 혐오 경험을 공유했고, 이를 빠르게 전파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차별의 교차성을 부정하고 젠더 갈등만을 강조하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성장해 각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¹ 한편 이들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메갈리아와 래디컬 페미니즘에 관한 논란은 현재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범죄자 또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젠더 위계에서 상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을 향해 젠더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여성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논쟁 과정에서 주요 이념으로 부상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을 비롯해 가부장제 아래에 억압받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해방을 지향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젠더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부장적 억압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 가령 남성은 강인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은 남성성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역으로 남성을 ‘남자다움’의 굴레에 가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 기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페미니즘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했고, 교보문고는 3배나 증가했다.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상위 50권 중 20권이 페미니즘 관련 도서이기도 했다.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주류 집단인 남성은 물론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남성중심적 사고가 내면화된 여성들의 지지도 얻어야 하는 힘든 운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 남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시도로 보고 받아들여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계는 쉽사리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7월,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게임 회사 ‘넥슨’이 자사와 계약한 성우가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건을 비판하며 페미니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있었다. 더불어 심상정 전 대표는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이라는 선언까지 했다. 원내 정당이 대량의 지지자 손실을 각오하고 소수집단을 지지한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이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수많은 남성 당원들이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정의당을 탈당했고, 결국 문화예술위원회는 논평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을 향한 성희롱 발언과 비하 발언 등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고, 결국 정계의 페미니즘 논의는 더욱 위축되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의 논평 철회 사건은 한국에서 소수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치인들은 아예 성평등에 관한 이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월 성평등을 다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토크 콘서트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

¹ 메갈리아의 반란, 108~119쪽.

성으로'에 참석했는데, 이곳에서 젠더 폭력이 무엇인지 물으며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젠더 폭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더 나아가 최근에는 여성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젠더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한국 젠더 운동의 규모는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들이 연대하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과 여성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존재하므로 남성과 여성만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젠더 논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의 다양성을 인지해야 하며, 성평등을 논의할 때는 남성과 여성만이 아닌 성소수자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의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받아 들여진다. 특히 유교적 전통을 따르는 보수 정치계와 근본주의 신학을 따르는 종교계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운동은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축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축제 한 켠에는 언제나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있다. 이는 ‘반동성애 집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물론 실제로 반동성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동성혼 합법화 등 성소수자 차별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상당수다. 2016년 기준, 50개 국가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표로 정리한 결과 한국은 45위를 차지했다.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가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무비판적으로 소비된다. 술자리에서 같은 성별의 학생끼리 팔을 교차해 술을 마시는 것을 ‘게이샷’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평소 “너 게이냐?”와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직접적인 차별 발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흔히 “남자친구 있으세요?”와 같이 상대방의 성적 지향을 속단함으로써 나오는 발언도 성소수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사소한 일 같지만 그런 사소한 일조차 바꾸지 못한다면 사회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페미니즘 이슈와 마찬가지로 정계는 소수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JTBC의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망설임 없이 반대한다고 말했고, 홍준표 후보가 재차 물었을 때도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이 추진했던 것과 정반대 의견으로,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표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있든, 표를 계산했던 이때 문재인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정체성은 통째로 부정되고 말았다. 한 개인의 정체성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계의 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 실정인지 보여준다.

정치인들이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성애법이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라는 발언을 했고,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에이즈 감염자 급증의 주요원인이 남성들의 동성애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기독교자유당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활동을 해 3195명의 개인과 62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인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했을 때 사회적 여파는 상당하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 이후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당당히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해도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미

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과 트위터를 통해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 낼 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대중의 인식 변화였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을 통해 혐오가 정당화되는 순간 소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만다.

2017년 4월에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병사들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당시 육군 중앙수사단은 병사들을 추궁하거나 협박해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 위반을 근거로 처벌하려 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92조 6항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소수자 병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군형법에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래 92조 6항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계간을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사건 당시 미국 CNN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는 한국군의 소도미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병사 색출 사건을 일제히 비판했다. KBS가 해당 사건을 병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도한 것과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15년 연방 대법원이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최근에는 핀란드와 독일,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은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정도로, 원내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뿐이다. 한국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정치적 사안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출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봤듯 여성과 성소수자는 정치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중심적 문화로 인해 정치계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소수자 역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혼인에 제약이 생기는 등 제도적 차별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젠더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비난을 듣거나 타자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는 연대하여 활발히 젠더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정치 제도적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 지수가 매년 세계적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는 근대의 이식과 급격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성숙할 기회를 잃은 시민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여성 인권에 관한 정치적 논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때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23만명의 동의를 얻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며 낙태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 인권을 위한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 일이다. 그런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미지근하다. 19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한편 지난 10월 유엔의 인권 기구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정부에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고, 많은 나라들이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리주의는 동의어가 아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공선을 합의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사회구성원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봤을 때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미 개인 인식의 문제의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가 되어버린 소수자 혐오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는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기득권에 의해 억압받거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가길 희망한다.

인터넷 및 기사

“성난 여성들의 무기는 책:”, 한겨레신문, 2016.3.7.

“한국 기업 여성임원 0.4% ‘OECD’꼴지”, <한겨레신문>, 2017.3.7.

“IPU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여성가족부>, 2017.8.31.

논문 및 단행본

김소영, 신자유주의 시대의 폭력, 육체, 인지적 매핑, 젠더와 문화 제4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1.

김영선, 1960~70년대 여성운동의 국제화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활동, 현상과인식 118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2.

김지혜 외 7명,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SOGI법정책연구회, 2016.

박채복, 한국 여성운동의 전개와 과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2005.

서두원,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제147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2012.

유민석, 메갈리아의 반란, 봄알람, 2016.

이동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차이,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15.

천정환,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논쟁까지, 역사비평 제16호, 역사비평사, 2016.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 범죄,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17.

번역서

토니포터, 맨박스, 김영진 역, 한빛비즈, 2016.